

2017년 대권 수권능력시험 문제:

교육/청소년인권 기본영역

더문캠 정책본부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교육·청소년 인권 정책의 취지로 볼 때, 주어진 보기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달드립니다.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반면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사교육 참여시간으로 인해 학습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동의하며, 문재인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력보장제 및 1대 1 맞춤형 성장 발달시스템 도입 △학생성장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문재인 후보는 3월 22일 교육정책의 대강을 발표하면서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3. 교육현장에서 체벌과 언어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부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5일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이다.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다.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다. 군대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5. 문재인 후보는 ‘학생-학부모-교사 주권시대 개막’을 주요 교육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6.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액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체당금’ 도입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익보호를 위한(도·소매, 음식·숙박점업 등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안심알바가게 협약 및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 △아르바이트 청년의 휴식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휴게의자 제작, 청년마음약국 운영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의 공조체계 확립(근로기준법 위반의심사업장 청년모니터링단 확대·분기별 운영을 통한 정보구축 및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청소년의 참여권과 결정권을 실질화하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학생회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현행법을 징벌위주의 절차에서 회복적 해결 절차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9. 청소년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정당한 사회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공론과 합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해 현재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10.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10대 인권정책에 ‘취약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당의 공식후보로 결정되면 청소년의 법적 방어권 강화를 포함한 인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